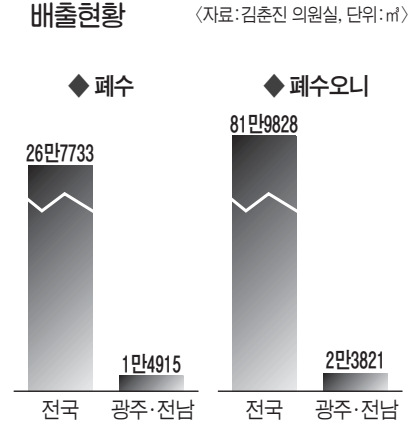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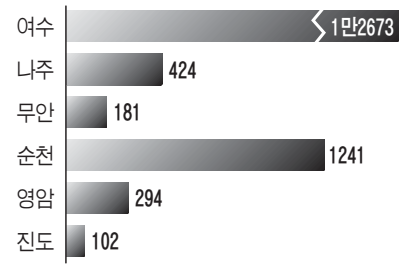
천혜의 전남 해안, 쓰레기에 묻혀간다

‘전국의 50%(리아스식 해안 6419km)에 이르는 광활한 해안선, 세계 5위로 전국의 44%(서남해안 갯벌 1037km)를 차지하는 천혜의 갯벌.’ 전남이 갖고 있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객들이 내다 버린 쓰레기에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해마다 밀려오는 외국산 해양 쓰레기만 매년 몇 만톤에 달하고 수거비만 수 십억원에 달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기로 했던 육상폐기물 투기 금지 방침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바다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책의 신빙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들 입장만 고려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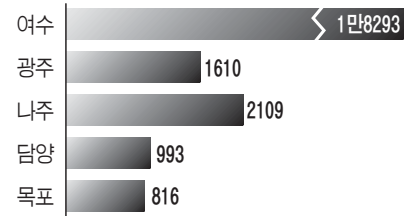
■2012년 광주·전남 폐수와 폐수오니 배출현황 (자료:김춘진 의원실, 단위:mt)



◆지역별 폐수 배출량



◆지역별 폐수오니 배출량



■2007~2012 전남 해양 쓰레기 수거량 (자료:전남도, 단위:톤(t))



◇한 해 전남 해안에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 5만t =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지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만 t에 이른다.

그나마 전남의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2007년 1만5961t ▲2008년 1만4767t ▲2009년 1만5274t ▲2010년 2만4912t ▲2011년 2만1103t ▲2012년 5만1037t 등으로 꾸준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불라벤, 덴빈 등 대형 태풍으로 바다로 밀려든 잡목·비닐·폐자재 등에 양식장 시설물 등이 겹치면서 나온 재해 쓰레기만 3만7810t에 달했다. 또 이의 지역민들과 각 자치단체가 해변 정화활동으로 겨우들이는 쓰레기도 5560t에 이른다.

전남도가 지난해 이들 쓰레기 수거에 들인 비용만 국비 19억, 지방비 30억 등 50억 원을 육박한다.

전남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국비 25억, 지방비 35억 등 모두 60억을 쏟아붓는다. 예산·인력 등을 이유로 모든 해양 쓰레기 수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가 수거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대략 3만8000여t. 집중오염·대중 등 육상에서 밀려오는 생활쓰레기가 8000t, 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3만 수준으로 집계했다.

작년 한해 밀려 온 해양쓰레기 수거량만 5만1037t 달해

해류타고 중국 등 '외국산'까지 동등...청소비용 수십억

정부, 산업 폐기물 해양 투기 연장에 환경단체 반발 거세

여기에 중국 등 해외에서 밀려오는 '외국산쓰레기'도 해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2012년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 일자도의 경우 지난해 수거된 쓰레기 10개 중 1개가 외국산쓰레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도 하조도의 경우 당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054개의 쓰레기 중 외국산 쓰레기가 스티로폼 부표(517개·25.1%)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 해남(158개), 고흥(74개) 해변 등에도 외국산 쓰레기가 발견됐다.

문제는 전남의 경우 섬 지역이 많은데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의 경우 해류를 타고 밀려드는 외국산 쓰레기를 처리할

만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섬을 대표적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전남도 입장에서는 절실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기업 폐수 오니 해양 투기=쓰레기 뿐 아니다. 여수 등 전남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매해 수만m에 달하는 폐수와 폐수 오니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당 김춘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배출된 폐수 오니 배출량은 2만3821m³으로 지난 2011년 2만754m³에 비해 3000m³ 이상 늘어났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폐수(1만2673m³)와 폐수 오니(1만8293m³)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으로 꼽혔다.

◇뒹굴뚝질하는 환경 정책=정부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해양 투기 연장 방침도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이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방침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산업 폐기물 대란'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가 오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인데다, 해양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애초 금지하기로 했던 산업 폐기물 투기를 연장하기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는 발견 구역도 넓게 퍼져 있고 연안에서 벗어난 지역의 해양 쓰레기, 외국산 쓰레기의 경우 얼마나 되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남 해양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환경마크 인증제품 1만개 돌파

정부 1992년 도입후 21년만에 공공부문 구매 1조 7270억원

환경마크 인증제품이 1만개를 돌파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환경마크 인증제품이 제도 도입 21년 만에 1만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제품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1만 35개, 인증기업은 1952개사에 이른다. 대상 품목도 문구류, 가구류, 세제류 등 147개 제품, 호텔서비스 등 3개의 서비스군 등 총 150여 품목에 달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로 인해 수요가 창출되며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을 인증제품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의무구매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공공부문의 친환경제품 구매금액은 2549억원에서 지난해 1조 727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제품이 1만개를 돌파함에 따라 제조사, 유통사와 협력해 강화하는 한편 인증을 위해 기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마크 심사 인력'을 양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만t 감축

환경부 2012년 이행 보고서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40만t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소나무가 연간 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788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가 20일 내놓은 '201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배출량(2007~2009년 연평균 배출량의 평균)인 488만7000t보다 39만4000t(8.1%) 감소한 449만3000t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 감축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7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했다.

기관별로는 지방공사·공단인 12.2%로 감축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국·공립대학 5.3% 등의 순이었다.

공공부문 기관들은 냉난방 온도 준수와 승강기 운행 횟수 조정 등 행태 개선이 6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옥상녹화 등 시설개선이 6.9%를 차지했다. 예산 부족으로 시설을 교체하기 힘든 기관들이 시설개선보다는 행태개선 활동에 의존한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준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2020년까지는 2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9개 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의무 위반

환경부 고발조치

광주·전남 9곳 사업장이 비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62곳을 점검한 결과, 52개(20%) 사업장에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지표면에 축적돼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흘러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에 따라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점검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1곳, 전남 8곳 등 모두 9곳의 미신고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을 모두 고발 조치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WWW.MODONG.CO.KR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문의전화: 010-9199-7000 / 010-7171-5382

건축, 토목 공사 자재공급 안내

원 석

A급 재당 6,000원
B급 재당 5,500원
C급 재당 4,500원

골 재

보조기층 : 현장직구입
자갈 : 현장직구입
개비온 : m³당 12,000원
모래 : m³당 12,000원

전 석

A급 : 25t 기준 320,000원
B급 : 25t 기준 230,000원
사석 : 25t 기준 190,000원

견치석

공사용 1,300원(개당)
묘축용 1,300원(개당)

기 타

◎ 자연 조경석 생산
◎ 징검다리 주문생산 (010-5388-3666)

판 재

구분	반제품	규격	완제품
생 산 품 목	무 판 재	~ 800 폭	버 니 지 석 연 마 잔 다 들 축 두 기 사 구 석 경 계 석
	16,000원 부터 30T (M ² /당)	3만 M ³ 이상 항시보유	

등록 제 0597579 호

상표등록 중 상표권자 강중희

상표물 사용함 상품 및 구분 2004년 10월 29일

제 19 류 특 이 정 령

규석종 9년

※ 전 품목 현장 상차도기준

(채석장소재) 모동기업사

주소 : (670-853)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
전화 : (055) 944-5382 / FAX : (055) 944-5381
H-P : 010-7171-5382 modongcokr@nate.com

(판매공장) 모동석재(주)

주소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5
전화 : (055) 943-8946 / FAX : (055) 943-8947
H-P : 010-9171-2117 / 010-8260-0135

콘도/펜션/별장 “급매”

요양시설 가능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거리
- 건평28평, 대지지분60평, 5층 건물중 3층 총 55세대, 편백나무 시공
- 에어컨, TV, 침대, 쇼파, 냉장고, 전자렌지 비데, 냉온수기, 침구세트 등 일체
- 분양가 1억600만원 → 급매 9000만원
- 28평 2세대 남음

주인 직매 : 010-3605-5000